

기술진보와 부문간 불균등발전 : 시장가치개념에 대한 하나의 해석*

류 동 민**

< 目 次 >

- I. 문제제기
- II. 시장가치 규정에 대한 기존 논의
- III. 개별가치와 시장가치
- IV. 가치와 노동생산성
- V. 기술진보와 시장가치
- VI. 맺음말

I. 문제제기

필자는 노동가치론의 기본명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가치는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추상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라 할 때, 이러한 명제는 그 자체로서는 증명되거나 반증되기 어려운 '이론적 입장'이라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拙稿, 1994a).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론이라고 말할 때의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이론은 아니며 ...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실이라 생각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Hunt, 1983 : p. 339) 것이다. 노동가치론의 객관성·과학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현재의 이론적 정세에서는 노동가치론이

* 이 글의 초고는 1996년 2월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지정토론자였던 장은경
제연구소의 유철규 박사와 익명의 심사위원 두 분께 감사드린다.

** 가야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경향에 관한 분석에 구체적으로 어떤 함의를 제공해주는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가치론과 관련된 여러가지 개념이나 명제들은 그것이 포착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맥락에서 위치지워져야 하며, 다음으로 현대자본주의 하에서 그러한 특징이 변형되어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개념 및 명제의 내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점이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자본축적의 본질적인 특징은 개별자본간 경쟁에 의해 강제되는 끊임없는 기술혁신,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생산부문간의 불균등발전이다. 특히 노동가치론에서 제기된 '시장가치(market value)' 개념을 이용하여 기술진보와 부문간 불균등발전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정합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가치 규정 그 자체를 검토한 뒤에, 기술진보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발전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시장가치 개념이 수행하는 역할을 확인할 것이다. 즉 노동가치론의 몇 가지 전제를 승인한 위에서 기존 논의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시장가치 개념의 이론적 역할을 구명하고자 한다.¹⁾ 이를 통해 『자본론』에서의 외견상 대립되는 규정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동태적인 기술변화과정을 설명하려는 하나의 일관된 관점 하에서 재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특히 전체 논의의 과정에서 노동시간/가치/가격 간의 명확한 구분, 이에 기초하여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이라는 일반화된 개념을 '노동시간의 가치표현' 및 '가치의 화폐표현'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해하는 것은 중요한 실마리로 이용될 것이다.²⁾

II. 시장가치 규정에 대한 기존 논의

주지하듯이 『자본론』 제3권 제10장에서의 시장가치 규정은 명백히 두 가지 규정이 혼재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의 원인

1) 이러한 의미에서 이채언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중요하다.

“가격에 관한 수요공급의 이론은 ... 경제성장이나 자본축적 등과 같은 전체 경제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맑스는 가격의 수요공급이론에 전체 상품세계에 대한 다양한 매개적 관계(intermediary relationship)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관계적 범주들은 (α)시장가격, (β)시장가치 그리고 (γ)개별가치이다”(Lee, 1994: p. 263).

이 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매개개념(intermediary concept)으로서의 시장가치의 이론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2) 이에 관해서는 拙稿(1994b), pp. 355-61을 참조하라.

을 제공하였다. 즉 이른바 ‘기술적 평균시장가치론’(인용문 A)과 ‘수요공급시장가치론’(인용문 B)의 대립이 그것이다.

〈A〉 “시장가치는 한편에서는 특정의 생산분야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平均價値로 간주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그 분야의 平均的 條件 아래에서 생산되며 그 분야의 상품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의 個別價値로 간주되어야 한다”(Marx, 1990 : pp. 208-9).

〈B〉 “공급량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가장 나쁜 조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항상 시장가치를 규제하며, 공급량이 너무 큰 경우에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시장가치를 규제한다”(Marx, 1990 : p. 217).

더구나 이는 농업부문에 존재하는 차액지대의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평균원리와 한계원리의 대립이라는 문제와도 관련되었다(Cho, 1990 : pp. 74-80 참조).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먼저 가치크기가 전적으로 생산과정에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요요인의 영향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가라는 문제이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투하노동학파’와 ‘추상노동학파’의 대립이라는 이론사적 맥락과도 일치하는 것인데, 가치론의 전반적인 경향이 전자에서 후자로 옮겨가는 것에 비례하여 시장가치 규정도 ‘수요공급시장가치론’ 또는 ‘한계원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논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논의는 시장가치 규정은 궁극적으로 수요요인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오히려 『자본론』의 원래 문제의식에 더욱 적절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기에 이른다.³⁾

두 번째 문제는 가치개념이 충족하리라 예상되는 여러가지 원리(또는 기준)

3) Groll(1980)은 생산부문 내의 기술적 조건의 차이로 말미암아 공급곡선이 일정한 범위의 불연속적인 형태로 주어지면 수요조건은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한 점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서는 결국 수요요인에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Indart(1987-8)는 시장가치에 관한 두 가지 규정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며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이라는 『자본론』의 방법에 부합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아울러 시장가치크기의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문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기술적 평균규정’을, 수급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요공급규정’을 따르고 있다. 적어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Lee(1994)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들이 엄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혼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오히려 Steedman(1975)에 의해 제기된 바 있는 결합생산이 존재하는 경우의 논리적 난점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고려되었는데, 대표적인 조건은 가치크기가 양(+)의 값을 가져야 하며(positivity) 가법적이어야 한다는(additivity) 것이었다.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가치계산이 ‘공시화(synchronization)’의 원리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출된 노동량을 계산할 때에는 어느 한 시점을 공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 노동생산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시장가치에 관한 『자본론』의 두 가지 규정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宇野학파의 견해(宇野, 1964: 伊藤, 1988: Sekine, 1982-3)를 받아들이면서, 위에서 말한 두 번째 논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宇野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시장가치는 시장수요가 증가하는 순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해당 상품의 기술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원래 시장가치는 ... 수요공급의 균형을 기초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그것은 ... 공급의 증가가 어떠한 생산조건의 생산에 의한 상품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中位的 생산조건에 의한 상품의 가치가 시장가치를 이룬다는 것도 그 상품의 공급증가가 이러한 상품의 생산증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히 優良한 조건 또는 열등한 조건의 것이 예외로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공급증가가 비교적 열등한 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시장가치는 이 상품의 개별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 반대로 공급증가가 우량조건을 가지고 생산하는 자본의 상품생산물에 의해 충족되는 경우에

4) Steedman(1975)에 대한 대응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치의 가법성을 포기함으로써 음의 가치(및 잉여가치)라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선형계획법을 이용한 Morishima(1976)의 고전적인 논의에서부터 최근의 Lee(1993)에 이르는 논의들이 그러하다.

한편 Flaschel(1979)은 맑스의 가치크기결정의 기본특징을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p. 70). 요약하면, 실제로 지출된 노동시간의 문제라는 점, 현실적으로 생산과정 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숙련 및 강도 등에 관해 평균원리가 적용된다는 점, 시장에서 판매된 상품량에 대해서 공시적인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점, 노동생산성에 반비례한다는 점, 가법적 원리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 등이다.

는 이 상품의 개별적 가치에 의해 시장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宇野, 1964 : p. 159).

이러한 견해는 도식적으로 평가하자면 ‘수요공급시장가치론’ 또는 ‘한계원리’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다.⁵⁾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어쨌든 “개별가치들의 단순한 平均은 더이상 시장가치를 올바르게 정의할 수 없게”(伊藤, 1988 : p. 84) 되므로, ‘기술적 평균시장가치론’ 또는 ‘평균원리’는 사실상 포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가치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평균원리’와 ‘한계원리’간의 대립구도를 지양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가치개념이 충족해야할 조건과 관련하여 평가해보면, 宇野학파의 시장가치론은 한편으로는 공시화의 원리에 대한 특정한 해석에 기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질노동의 도그마’, 나아가 가치의 가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전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후자를 비판하는 형태로 宇野학파의 견해를 개선하고자 한다. 즉 동질노동을 선택적으로 전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치의 가법성을 포기하더라도 논리정합적인 해석이 가능함을 보이려 한다.⁶⁾ 이미 이것은 결합생산에 관한 논의에서 하나의 성과로 얻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에 관한 필자의 기존 주장(拙稿, 1994b)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Ⅲ. 개별가치와 시장가치

이하에서는 논의의 핵심을 명료하게 보이기 위하여 간단한 숫자예를 이용하기로 한다.⁷⁾

상품 X와 노동을 이용하여 동일한 상품 X를 생산하는 두 가지 기술이 병존하는 상황을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상품 X의 양은 구체적인

5) 물론 같은 宇野학파라 하더라도 미묘한 견해차이는 보인다. 伊藤(1988)의 경우는 『자본론』의 두 가지 규정의 ‘내적 연관’(p. 81)을 확보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Sekine(1982-3)는 명시적으로 맑스의 시장가치론이 이른바 한계혁명보다도 훨씬 더 유의미한 한계분석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p. 429)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계원리’를 부각시키고 있다.

6) 더욱이 이러한 주장은 『자본론』 제1권에서 중요한 분석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개별가치’ 개념의 사실상의 폐기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7) 이 예는 Sekine(1982-3)에 의거하고 있다.

〈표 1〉

			X(투입량)	노동투입량	X(산출량)
기	술	1	12	3	65
기	술	2	3	12	100
총		계	15	15	165

사용가치의 양을 단위로 해서 표시되며, 노동투입량은 측정된 시간(measured time)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시장가치 개념은 일차적으로는 동일 부문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 X만을 상정하였다.

그런데 宇野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상태에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할 때 생산량의 증가가 기술1 및 기술2에 의해 각각 얼마만큼의 비율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한다. 물론 이 비율은 여러가지 우연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므로 선형적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이제 추가적인 생산량은 기술1과 기술2에 의해 각각 절반씩 충당된다고 가정하자. 즉 dX , $dX^{(i)}$ 를 각각 상품X 생산량의 증가분, dX 중에서 기술 i 에 의해 충당되는 부분이라 할 때, $dX^{(i)} / dX = \frac{1}{2}$ 이다. 한편 생산량의 크기까지 고려하여 일종의 탄력성 개념이라 할 수 있는 $\sigma^{(i)} = (dX^{(i)} / dX) \times (X / X^{(i)})$ 를 계산해보면, $\sigma^{(1)} = (\frac{1}{2}) \times (165 / 65) \simeq 1.269$, $\sigma^{(2)} = (\frac{1}{2}) \times (165 / 100) \simeq 0.825$ 를 얻는다. 이에 기초하여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관념적인’ 사회적 기술을 계산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의 기술1 및 기술2는 〈표 1〉의 각 행에 대해 일률적으로 1.269 및 0.825를 곱해줌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sigma^{(1)}$, $\sigma^{(2)}$ 는 〈표 1〉의 시점과 〈표 2〉의 시점에서 각 기술 1, 2가 차지하는 비중의 상대적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라 할 수 있다. 즉 〈표 1〉의 시점에서는 전체 생산량 중에서 약 39.4%(=65/165) 정도가 기술1에 의해 생산되고 있었으나, 〈표 2〉의 시점에서 추가되는 부분 중에서는 50%(82.5/165)를 차지한다. 따라서 기술1의 비중을 지수로 나타내면 $50 / 39.4 \simeq 1.269$ 가 되는 것이다.⁸⁾

8) Sekine(1982-3)는 이를 ‘기술(i)의 공급탄력성(supply elasticity of technique (i))’이라 불렀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A의 B탄력성’은 통상 ‘B가 1% 변화할 때 A가 몇%나 변화하는가’를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명칭은 엄밀한 것은 아니다. 또한 〈표 2〉에서 추가되는 생산량을 반드시 〈표 1〉에서의 생산량과 같이 165라고 놓을 필요는 없다. 설사 추가되는 생산량이 165에 비해 극히 미소한 양이라 하더라도 이하의 논의는 일반성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宇野학과 시장가치론의 핵심은 바로 이와같이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적 기술의 계산방식에 있다. 필자는 이러한 방식이 시장가치개념의 동학적 정식화를 위한 이론적 기초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2〉

			X(투입량)	노동투입량	X(산출량)
기	술	1	15.2	3.8	82.5
기	술	2	2.5	9.9	82.5
총		계	17.7	13.7	165

『자본론』의 ‘기술적 평균시장가치론’ 또는 우리가 가치 크기 결정에 대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균원리’적 관념에 따르면, 숫자예에서의 시장가치는 〈표 1〉의 기술1과 기술2를 각각의 시장점유율을 가중치로 계산한 가중평균값으로 정해진다. 만약 기술수준 또는 부문내 기술분포의 변화가 없는 정태적인 체계를 상정한다면 이러한 규정에는 아무런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술수준의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에 투입이 이루어지고 12월 31일에 산출이 나오는 시점투입-시점산출(point input-point output)의 상황을 상정해 보자. ‘평균원리’적 관념은 12월 31일 현재 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이미 1월 1일에 이루어진 투입의 기술적 조건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셈이다. 그러나 12월 31일 현재 기술(또는 부문내 기술분포)이 변화하였다면 다음 기의 생산은 변화한 기술수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가치의 정확한 크기는 기술수준(또는 분포)의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이 계산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분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기술적 평균시장가치론’의 규정이 타당하다는 것은 〈표 1〉의 숫자예에서 $dX^{(1)}/dX=65/165$, $dX^{(2)}/dX=100/165$ 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때에는 $\delta^{(1)}=\delta^{(2)}=1$ 이기 때문에 〈표 1〉과 〈표 2〉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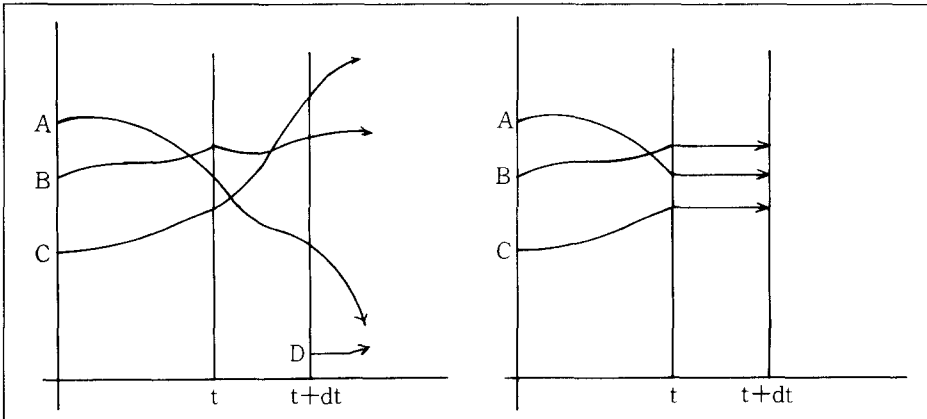
각각의 그림에서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 세로축은 각 기술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먼저 〈그림 1〉은 생산성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기술 A, B, C의 시

장점유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점 t 의 시장가치는 시간이 미소하게 변화할 때(즉, $t+dt$) 상품의 생산이 어떤 기술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가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시장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t, t+dt]$ 구간에서의 각 곡선의 기울기이다. 물론 기술분포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시점 $t+dt$ 에서 새로운 기술(D)이 출현할 수도 있다. 한편 <그림 2>는 정태적으로 이해된 ‘기술적 평균시장가치론’이 적용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시점 t 에서 시점 $t+dt$ 로의 경과 속에서 세 가지 기술의 분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라면($\delta^A = \delta^B = \delta^C = 1$) 전통적인 규정이 적용되어도 무방한 것이다.

물론 이상의 설명과정은 최초에 사회적 수요의 외생적인 증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시장가치의 결정과정에서 수요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가치의 크기는 수요증대의 크기에 의해 직접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림 1>

<그림 2>



이제 <표 2>의 기술조건에 상응하는 가치체계는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품으로써 구할 수 있다.

$$15.2\lambda + 3.8\alpha_1 = 82.5\lambda \quad (1)$$

$$2.5\lambda + 9.9\alpha_2 = 82.5\lambda \quad (2)$$

$$3.8\alpha_1 + 9.9\alpha_2 = 13.7\alpha \quad (3)$$

여기에서 λ 는 상품 X의 가치, α_i 는 기술i에서의 ‘노동시간의 가치표현’, α 는 부문 전체의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이다.

〈표 2〉에서 X의 투입량은 사용가치단위로 표시되어 있으며, 노동투입량은 이질노동의 동질노동으로의 환원⁹⁾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시간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λ 및 α_1 , α_2 를 곱해 주어야 가치범으로 환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3)식의 우변에서 α 는 집계적 차원에서 총노동시간(13.7시간)이 얼마만큼의 가치량으로 표현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부문 전체의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이다.拙稿(1994b)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구체적인 가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α 의 크기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가령 $\alpha=1$ 이라 놓으면, (1)~(3)식은 세 개의 미지수에 관한 세 개의 방정식이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유일한 해를 갖는다. 즉 $\alpha_1 \simeq 1.647$, $\alpha_2 \simeq 0.751$, $\lambda \simeq 0.093$ 이다. 사실 이렇게 계산한 λ 의 값은 $\alpha=1$ 이라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에 대한 고려없이 Sekine(1982:3)가 구한 값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각각의 기술에 부여되는 해석은 달라진다. $\alpha_1 \simeq 1.647$ 이라는 것은 기술 1에서의 노동 한 시간은 가치를 1.647단위 생산한다는 의미이며, 마찬가지로 기술 2의 경우 노동 한 시간은 0.751단위의 가치를 생산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 1〉에 대응되는 가치체계를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의 합계가 세 번째 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계산과정에서 근사값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표 1〉에서 총투하노동량은 15시간임에 반해 〈표 3〉에서 그것은 13.953 단위의 가치로 표현되어 있음에 유의하자. (1)~(3)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alpha=1$ 이라 가정하였음을 상기한다면, 기술변화로 인해 α 의 크기도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기술1은 기술2에 비해 자본집약적이다. 따라서 기술진보가 일반적으로 자본집약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α 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기술진보에 따라 경

9) 물론 이 경우는 동일 재화를 생산하는 두 가지 집합노동에 관한 비교이므로 흔히 말하는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질노동의 동질노동으로의 환원이라 표현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 전체적으로 단위시간당 창출되는 가치량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 3〉

	X(투입량)	노동투입량	X(산출량)
기 술 1	1.116	4.941	6.045
기 술 2	0.279	9.012	9.300
총 계	1.395	13.953	15.345

흔히 말하는 ‘개별가치’라는 개념은 〈표 1〉의 물량체계에서 각 기술의 노동이 이미 동질화되어 있다는 전제($\alpha_1 = \alpha_2 = 1$)를 받아들임으로써 계산된다. 즉 기술 i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의 개별가치를 λ_i 라 할 때,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

$$12\lambda + 3 = 65\lambda_1 \quad (4)$$

$$3\lambda + 12 = 100\lambda_2 \quad (5)$$

$$15\lambda + 15 = 165\lambda \quad (6)$$

(4)~(6)식으로부터 $\lambda=0.1$, $\lambda_1 \simeq 0.065$, $\lambda_2 \simeq 0.123$ 을 얻는다. 당연히 양자의 가중평균치는 (1)~(3)식으로부터 구한 λ 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재하는 것은 〈표 1〉의 물량체계이며 그에 대응되는 가치체계는 〈표 3〉일 따름이다. 일견 체계 (4)~(6)은 체계 (1)~(3)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1)~(3)은 방정식의 숫자에 비해 미지수의 숫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일정한 가정($\alpha=1$)이 필요하지만, (4)~(6)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방정식의 숫자와 미지수의 숫자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6)식의 체계는 “모든 이질적인 노동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가정에 입각하지 않는 한, 이미 $\alpha=1$ 및 $\alpha_1=\alpha_2$ 라는 암묵적인 가정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즉 (4)~(6)식은 ‘동질노동의 도그마’를 전제하고 있는 일종의 ‘위조된 체계(spurious system)’라 할 수 있다. 더욱이 (4)~(5)식과 (6)식은 서로 독립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즉 (6)식에서 λ 가 먼저 결정되면, 이에 기초하여 (4)~(5)식의

로부터 λ_1 및 λ_2 의 값이 결정된다. 이는 개별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투입물의 시장가치를 먼저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정태적인 체계를 상정하거나, 기술변화의 패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비현실적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IV. 가치와 노동생산성

Okishio(1963)는 가치가 노동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며, 그 크기는 노동생산성의 변화와 반대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p. 29). 가치가 노동생산성의 역수라는 이러한 견해는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나아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대중적인 표상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호소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¹⁰⁾ 『자본론』에서도 이러한 주장의 典據는 분명히 찾을 수 있다.¹¹⁾ 그러나 맑스는 복잡숙련노동의 단순비숙련노동, 보다 일반적으로 이질노동의 동질노동으로의 환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Marx, 1991 : p. 55). 흔히 잉여가치율 추계에 관한 실증연구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측정된 노동시간을 단순히 집계하는 절차는 모든 부문의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노동생산성과 가치의 관계에 대해 맑스가 제시한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노동생산성이 증대되더라도 변화한 생산성이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산되는 가치량은 불변이라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는 앞의 원칙과 양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拙稿(1994b)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혼란은 부문간 생산성이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경우와 균등하게 발전하는 경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유의하면서 가치개념과 노동생산성간의 관련에 관해 정리해보기로 하자.

먼저 모든 부문의 생산성이 균등한 율로 증가하는 경우, 정의에 의해 가치량

10) Lipietz(1985)는 프랑스의 가치논쟁에 관한 부록에서, 현실에서는 가장 통속적인 형태의 노동가치론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사망선고’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11) “...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실현되어 있는 노동량에 正比例하고 노동생산성에 反比例한다”(Marx, 1991 : p. 50).

은 불변이지만 총노동시간이 동일한 한 생산성 증대로 인해 사용가치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사용가치 한 단위당 가치량은 감소하게 된다.

다음으로 생산성이 부문간에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간단히 하기 위해 경제 내에 세 개의 부문만이 존재하고 각각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일하며¹²⁾ 부문별 노동시간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이제 1부문 및 3부문의 노동생산성은 각각 5%, 3% 상승하고 2부문의 노동생산성은 5% 하락하였다고 하자. 필자는拙稿(1994b)에서 시점간 가치비교(intertemporal value comparison)의 문제를 다루면서 부문간 생산성이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경우, 단위시간당 가치창조능력은 생산성에 비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i 부문의 단위노동시간이 표현하는 가치의 양('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을 α_i 라 할 때, 해당 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사회 전체의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α_i 의 증가율이 양수, 반대의 경우에는 음수가 된다.¹³⁾ 숫자예에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1%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부문의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은 1부문의 경우 4%, 2부문의 경우 -6%, 3부문의 경우 2% 증가한다. 따라서 1부문의 경우 사용가치량은 생산성증가율에 비례하여 5% 증가하고 가치량은 4% 증가하므로 결국 사용가치 단위당 가치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3부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얻는다. 2부문의 경우에도 생산성은 5% 감소하였으며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은 6% 감소하였기 때문에, 사용가치 한 단위당 가치량은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이 경우에 정의에 의해 경제 전체의 가치생산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 노동시간이 표현하는 가치량도 불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생산성의 부문간 불균등발전으로 인해 각 부문별 '노동시간의 가치표현', 따라서 각 부문별 가치생산량은 변화하게 된다. 즉 각 부문은 노동생산성의 발전속도가 클수

12) 가격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이 비중을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단 이렇게 가정하기로 하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13) 사실 시점간의 가치의 절대량 비교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비단 노동가치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론의 근본적인 난제라 할 수 있는데, 필자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부의 증대는 사용가치량의 증대를 통해 파악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회소성을 가치의 원천으로 인정하면, 회소성만 증대시키려는 보수적 시도를 국부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이채연의 비판(한국사회경제학회 엮음, 1995: p. 123)은 초점이 빗나간 것이다. '회소성가치론'도 노동가치론과 똑같은 방식으로 '변화한 회소성수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의 '회소성'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라는 주관적 개념에 상대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인간노동지출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노동가치론과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록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일견 모순되는 듯한 이러한 결과는 경제 전체의 집계적 수준과 부문간 경쟁의 수준을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노동시간의 가치표현’과 ‘가치의 화폐표현’ 간의 구분은 집계적 수준에서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일정량의 노동시간은 정의에 의해 항상 일정한 가치량을 표현하므로, 전자는 항상 일정하며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후자 뿐이기 때문이다.

상품화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가치의 화폐표현’은 화폐상품(금) 생산부문의 생산성증가율에 의존하게 될 것이지만, 불환지폐제도 하에서는 통화량증가율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현대자본주의 하에서 가치분석의 의의는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의 부문간 격차 및 그것과 ‘가치의 화폐표현’의 변화 간의 상호작용을 구명하는 데에 있다.

V. 기술진보와 시장가치

이제 부문간 기술진보의 설명과정과 관련하여 시장가치개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살펴보자.

집계적으로 보면 가치의 합계=생산가격의 합계이고 시장가격의 합계 또한 시장가치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¹⁴⁾ 물론 이른바 ‘허위의 사회적 가치(false social value)’ 문제를 감안할 때 농업이라든가 기타 자본의 생산물이 아닌 천연자원에 의해 생산조건이 규제되는 부문이 포함된다면, 생산가격의 합계와 시장가치의 합계 간에는 괴리가 존재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또한 나의,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부문은 노동력상품의 ‘생산부문’-비유적인 의미에서의-이다. 노동력의 ‘생산부문’은 평균이윤율의 형성을 통한 전형과정에 참가하지 않으며, ‘생산’의 기술적 조건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물론 중요한 차이도 존재하는데, 예컨대 농업부문의

14) 이 문제에 관한 『자본론』 제3권의 서술은 매우 명확하다. 즉 집계적 수준에서 생산가격의 합계는 사회적 가치의 합계와 일치하며, 그것과 시장가치합계와의 차이가 ‘허위의 사회적 가치’를 나타낸다. 이에 관한 정리로는 Lee(1994)를 참조하라.

한편 시장가치의 합계와 시장가격의 합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본론』에서는 별다른 서술이 없다. 다만 시장가치는 “시장가격이 振動하는 重心”(Marx, 1990 : p. 212)이라는 의미에서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이 시장가치와 같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필자는 집계적 수준에서는 언제나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대는 자본가계급 내부분과간의 잉여가치 이전이라는 문제임에 반해 노동력의 경우는 계급간 대립이 걸려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拙稿(1994b)에서 노동력 가치와 임금이 정의상 일치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약 양자가 체계적으로 괴리되는 것이라면 잉여가치와 이윤의 대응관계가 파괴된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노동력의 '시장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체계적으로 달라짐으로써 일종의 '허위의 사회적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면, 잉여가치(따라서 착취)의 존재근거는 경험적인 사실로서만 설명될 수 있을 뿐 이론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어쨌든 시장가치의 합계와 시장가격의 합계는 각각 차원을 달리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고 작음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치를 가격으로 변환시켜주는 매개변수를 k 라 하면, 노동가치론의 출발점은 ' k (시장가치의 합계) = (시장가격의 합계)'라는 것이며, 이것은 결코 장기적 균형상태에서만 성립하는 관계식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에 의해 경제 전반적으로 가격설정능력이 증대하였다면 주어진 가치량에 대응되는 화폐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식상으로는 k 의 증대로 나타날 뿐 양자간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조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는 모든 산업에서 동시에 '시장가격 > 시장가치'¹⁵⁾일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어느 산업부문에서 '시장가격 > 시장가치'라면 다른 어느 산업부문에서는 반드시 '시장가격 < 시장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가치개념 자체가 동일 생산부문 내에서의 기술격차분석이라는 문제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의 관계를 부문별 성장과 연계시키고 있는 Lee(1994)의 성과를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① 성장산업의 경우 : 일반적으로 초과수요가 존재하며 시장가격은 시장가치보다 크다. 따라서 시장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급은 기술이 최열등한 자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시장가치의 크기는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개별 자본에 의해 규정된다. 즉 최열등자본보다 기술수준이 뛰어난 대부분의 자본들은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시장가격과 시장가치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과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의 격차에 기인하는 부분

15) 엄밀하게 말하면 '시장가치의 화폐표현'이 옳지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렇게 표기하기로 한다.

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¹⁶⁾

② 퇴보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공급이 존재하며 시장가격은 시장가치보다 작다. 따라서 시장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급은 기술이 가장 우수한 자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그 결과 시장가치의 크기는 생산성이 가장 뛰어난 개별 자본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부분의 개별자본들은 초과손실을 입게 되는데, 그것은 시장가격과 시장가치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과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의 격차에 기인하는 부분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즉 최우수자본 조차도 음의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

③ 평균적인 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상태에 가까우며 시장가격과 시장가치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시장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공급은 해당 부문의 중위적인 기술조건을 갖춘 개별 자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위적이지 못한 개별 자본들은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의 격차에 따른 초과이윤 또는 초과손실을 얻는다. 즉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에 기초하는 초과이윤의 구성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각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정리해보자.

(1) ‘시장가격<시장가치’인 산업에서 기술진보가 일어날 때 :

기술진보의 시동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먼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뒤떨어지는 자본이 최우수자본의 기술을 추적(catch-up)하는 경우라면 시장가치는 불변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최우수자본의 기술수준에 의해 시장가치가 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최우수자본의 기술수준 그 자체가 진보하거나 드물지만 열등자본이 최우수자본을 추월하는 경우라면, 시장가치의 크기가 감소함으로써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의 격차가 축소될 것이다. 즉 이 부문의 자본들이 입고 있던 초과손실의 크기가 축소된다. 그 진보속도가 매우 커서 양자간의 관계가 역전되어 ‘시장가치<시장가격’으로 된다면 이제는 기술이 최열등한 자본이 공급하게 되므로 시장가치의 크기가 증가한다. 이때 원래 ‘시장가치<시장가격’이었던 부문에서

16) 이 두 부분을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자본론』 제1권의 분석수준과 제3권의 분석수준에서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허위의 사회적 가치’ 문제를 일단 사상한다면, 전자에 등장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은 사실상 후자의 시장가치 개념을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는 오히려 '시장가치' > '시장가격'인 상황으로 갔다가 다시 '시장가치 = 시장가격'인 상태로 돌아오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2) '시장가격' > '시장가치'인 산업에서 기술진보가 일어날 때 :

먼저 열등자본이 우수자본을 追及하는 경우라면, 시장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시장가치와 시장가격간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즉 초과이윤이 증대된다. 이때 원래 '시장가치' > '시장가격'이었던 부분에서는, 초과손실이 증대하게 된다.

다음으로 우수자본의 기술이 진보하는 경우라면, 시장가치는 불변이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산업(1)에서는 최우수자본의 기술진보가 유의미하며, 산업(2)의 경우에는 기술의 보급 및 확산이 유의미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술의 발전은 해당 부문의 시장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초과이윤을 증대시키거나 초과손실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술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부문에서의 반대방향으로의 변화에 의해 대응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拙稿(1994b)의 분석은 부문간의 문제에만 집중함으로써 사실상 동일부문에는 동일기술이 지배하고 있다는 암묵적인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는 시장가치 개념은 기본적으로 부문내의 기술격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문의 '성장'여부를 노동생산성의 증감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의하면서 앞에서의 분석을 다음과 같이 고쳐볼 수 있다.

(1) '생산성이 사회전체의 평균 미만으로 발전하는 부문 :

이 부문은 앞에서 언급한 (1)부문에 대응된다. 따라서 이 부문의 시장가치는 시장가격보다 크다.

먼저 이 부문의 시장가치는 최우수자본의 기술수준에 의해 규정되므로,¹⁷⁾ 최우수자본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상황이라면 시장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초과손실은 감소한다. 더욱이 부문간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 부문의 평균적인 생산성 증가율이 사회 전체의 평균수준 미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부문의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은 하락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므로 최우수자본의 기술개발 속도가 매우 빨라서 다른 부문을 추월하지 못하는 한, 궁극적으로

17) 여기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생산량 전부가 최우수자본에 의해 충당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만약 Ⅲ절의 숫자예에서와 같이 우수기술과 열등기술이 각각 50%씩 충당되는 경우라면, 열등기술의 개선도 시장가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문간 성장속도의 격차로 인해 선도기술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시장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시장가치 > 시장가격'의 상태는 '시장가치 = 시장가격'의 상태를 향해 접근하게 된다. 물론 양자가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는 여전히 초과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부문의 개별자본이 계속해서 자본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알 수 없다.

반면 열등자본이 追及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자. 이 경우는 시장가치가 불변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앞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부문의 생산성 증가속도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증가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시장가치는 다시 하락하게 되어 역시 '시장가치 = 시장가격'인 상태를 향해 이동하게 될 것이다.

(2)' 생산성이 사회전체의 평균수준을 넘어 발전하는 부문 :

이 부문은 앞에서 언급한 (2)부문에 대응된다. 따라서 이 부문의 시장가치는 시장가격보다 작다.

먼저 이 부문의 시장가치는 최열등자본의 기술수준에 의해 규정되므로, 최우수자본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상황이라면 시장가치는 불변일 것이다. 그러나 부문간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 부문의 평균적인 생산성 증가율이 사회 전체의 평균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부문의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이 상승함으로써 '시장가치 < 시장가격'의 상태는 '시장가치 = 시장가격'의 상태를 향해 접근할 것이다.

한편 열등자본이 追及에 성공하는 경우라면, 시장가치 자체가 하락하여 초과이윤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문내에서의 기술확산과정이 종료되면 다른 부문에 비해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가치는 다시 상승하여 초과이윤이 소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부문내의 문제와 부문간의 문제를 결합한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시장가치는 부문내 및 부문간의 생산성 격차와 기술개발의 양상에 따라 끊임없이 형성·파괴·재형성되면서 부문간의 균형을 확보해주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과정에서 개별자본의 행동논리를 지배하는 동기는 『자본론』 제1권에서 설명하고 있는 초과이윤추구 메커니즘이며,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파급되면서 균형화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는 '시장가치' 개념이라 할 수 있다.¹⁸⁾

18) 특히 '개별가치' 개념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초과이윤추구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개별자본은 가치범으로 평가되는 '특별잉여가치'가 아니라 가격범으로 표현되는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치에 의한 가격의 규제라는 명제는 시장가치라는 중간적 범주를 통해 구체화하며, 생산성의 동태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시장가치-시장가격관계의 역동적인 변화가 시장가치에 의한 시장가격의 '규제'의 내용일 것이다. 특히 시장가치 형성에 있어서 평균원리는 단순히 시장가치의 크기가 '개별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에서의 정태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부문간의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의 격차조정 및 부문내에서의 신기술의 보급·확산과정에 의해 경제 전체의 평균생산성이 경향적으로 관철된다는 동태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¹⁹⁾

또한 경기변동의 존재는 이와 같은 부문간 생산성 격차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호황기에 전반적으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한다면, 각 부문 내부에서 열등자본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부문내 생산성 격차의 분포가 커지게 될 것이다.²⁰⁾ 물론 이러한 영향이 모든 부문에서 균일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강한 부문의 시장가치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문의 시장가치는 작아질 것이다. 즉 앞에서 (1)-(3)으로 유형화한 것은 동일한 시점에서의 상이한 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시간적 국면에서도 적용가능한 것임을 의미한다(小幡, 1988 : pp. 270-5 참조).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장가치개념은 본질적으로 부문간 생산성의 불균등발전이라는 상황에서만 유의미한 개념이다. 만약 모든 부문의 생산성이 균등한 속도로 변화한다면, 앞서 숫자예에서 확인하였듯이, 가치량은 정의상 불변이기 때문에 시장가치의 합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우연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시장가격의 합계가 결정됨에 따라 시장가치-시장가격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

특히 이 경우에는 화폐가 상품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화폐가 그 자체 상품이라면 경제 전체의 가치량에 의해 화폐량도 규정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예컨대 금광의 발굴 등과 같은 우연적 요인이 없다면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의 변화는 전적으로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의 변화에만

19) "시장가치 형성에 있어서의 '평균화' 경향은 개별 자본들에 의해 수반되는 모든 주관적 활동의 中化(neutralization) 과정을 반영한다"(Cho, 1990 : p. 76)는 지적은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한 것이다.

20) 경기변동과 기술격차분포 간의 관계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되지만, 하나의 가능한 이론적 설명으로는 유철규(1996), pp. 119-22를 참조하라.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관리통화제도 하에서 화폐가 이미 상품이 아닌 경우라면,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의 변화는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의 변화와 '가치의 화폐표현'의 변화의 합이다. 물론 양자를 현실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관리통화제 하에서 지속적인 화폐량증대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면, 그것은 전반적인 가치의 화폐표현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영향이 모든 부문에 균등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 부문내의 기술격차 분포 뿐만 아니라 신용에의 접근가능성(Availability)의 격차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노동시간의 가치표현'과 '가치의 화폐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가치분석의 내용은 부문간 잉여가치율의 불균등한 전개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될 수 밖에 없다(拙稿, 1994b).

VI.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노동시간의 가치표현'과 '가치의 화폐표현'을 구분함으로써 시장가치개념에 대한 宇野학파의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이 생산성 격차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상황에서의 기술진보와 부문간 불균등발전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매개개념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력발전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부문간 불균등발전 과정은 시장가치라는 매개개념의 구체적 형성과정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시장가치에 관한 이 글의 분석은 필요한 수정을 가하면 즉각 시장생산가격(Market Prices of Production)에 관해서도 성립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일 생산부문내의 문제를 포착하고 있는 시장가치개념은 부문간 평균이윤율의 형성메커니즘과 결합되면서 현실적으로는 시장생산가격으로서만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²¹⁾

한편 Ⅱ절의 숫자예에서는 일견 선택가능한 기술의 목록이 미리 주어져 있어서 그 중의 하나(또는 둘 이상의 조합)에 의해 시장가치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시장가치를 규정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개별자본가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력 속에서 동태적으로 형성된

21) 시장가치는 사실상 부문내에서의 이윤율은 물론 잉여가치율의 불균등화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류동민·안현호(1995), p. 173 참조.

다. 즉 '사회적 필요기술의 결정'이라는 문제를 '기술선택의 문제'로 다룸으로써 우리는 가치크기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가치개념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Swanson, 1989: p. 61). 이로써 '평균원리'와 '한계원리'는 통일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의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에 비례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생산성 증가율 안에 이미 제품가격상승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의는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을 이용하여 잉여가치율이나 노동력가치 등을 추계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노동가치론의 핵심적인 대상이 부문간 불균등발전의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의를 갖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차피 가치법칙은 가격형태를 통해서만 형성되고 변형되면서 경향적으로 관철되는 것이므로 가격변동의 영향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에서, 적어도 근사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²²⁾

다음으로 가치개념이 분배 또는 축적이론 등의 구성을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만 위치지워진다면, '진정한 가치론(bona fide theory of value)'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념(예컨대 Woo, 1992)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관념은 가치가 부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척도가 되어야한다는 관념과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가치량의 시점간 비교가 가능한가라는 문제와도 관련

22) 필자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은 부가가치의 생산된 사용가치량에 대한 비율과 생산된 사용가치량의 노동지출량(시간)에 대한 비율의 곱으로 분해된다. 이때 '생산된 사용가치량'을 측정하는 지수(index)가 바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주장은 이러한 구분을 부분별 수준에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집계적 수준에서도 존재하지만 다소 은폐되어 있던 문제, 즉 각 부문에서 지출되는 노동량은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에 의해 측정·합산되어서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킨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평균적인 노동생산성의 발전속도를 기준으로 '노동시간의 가치표현'의 변화율을 측정하자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부가가치생산성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리변수(proxy)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문제가 예컨대 '1995년 현재 한국 경제의 잉여가치율은 얼마인가?'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별 잉여가치율의 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근사는 불가피하다.

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이론상황에서는 노동가치 개념이 그 자체로서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받는 것 못지 않게, 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산과정을 분석하는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진화론적 경제학이나 신슈페터주의 기술론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기술진보 그 자체가 단순히 이윤추구 동기 등의 외적 요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적 동학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일차적인 목표가 시장가치 개념의 설명도구로서의 유용성을 보이는 데에 있기 때문에, 기술진보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만 다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1. 柳東民(1994a), “勞動價値理論의 現代的 意義”,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經濟研究』 第2輯.
2. 柳東民(1994b), “價値와 價格의 量的 聯關에 대한 檢討”,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編, 『經濟論集』 第33卷 第3號.
3. 류동민·안현호(1995), “전형문제의 분석적 함의와 자본축적의 동학,” 『이론』 제11호.
4. 유철규(1996), “技術變化에 따른 利潤率의 調整經路와 技術隔差가 技術變化의 速度에 미치는 影響”,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5. 小幡道昭(1988), 『價値論の展開』, 東京大學出版會.
6. 宇野弘藏(1964), 『經濟原論』, 岩波書店.
7. 伊藤 誠(1988), 『價値와 恐慌』(金秀行 譯), 比峰出版社.
8. 한국사회경제학회 엮음(1995), 『가치이론논쟁』, 풀빛출판사.
9. Cho, Won-Hee(1990), “Value-theoretic Approach to the Dynamics of Competition, Monopoly-Capital and the State,” *Ph. D. Thesis*, London University.
10. Flaschel, P. (1979), “Wert und Arbeitswert : Wertproduktivität kapitalistischer Produktionsweise auf der Basis des Begriffs der Arbeit-

- sproduktivität im Systemzusammenhang," *Gesellschaft Beiträge zum Marxschen Theorie* 13, Suhrkamp Verlag.
11. Groll, S. (1980), "The Active Role of 'Use Value' in Marx's Economic Analysi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12, no. 3, in ed. by J. C. Wood(1988), *Karl Marx's Economics: Critical Assessment* vol. III, Croom Helm.
 12. Hunt, E. K. (1983), "Joan Robinson and the Labour Theory of Valu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7, no. 3-4.
 13. Indart, G. (1987-8), "Marx's Law of Market Value," *Science & Society*, vol. 51, no. 4.
 14. Krüger, M. & P. Flaschel eds. (1993), *Nobuo Okishio—Essays on Political Economy*, Verlag Peter Lang.
 15. Lee, C. O. (1993), "Marx's Labour Theory of Value Revisited,"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7, no. 4.
 16. Lee, C. O. (1994), "The Distinctions between Social Value, Individual Value, Market Value(a False Social Value) and Market Price in Marx's Third Volume of Capital,"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經濟研究』 第2輯.
 17. Lipietz, A. (1985), *The Enchanted World*(trans. by I. Patterson), Verso.
 18. Marx, K. (1990), 『資本論』Ⅲ(金秀行 譯), 比峰出版社.
 19. Marx, K. (1991), 『資本論』Ⅰ(金秀行 譯: 改譯版), 比峰出版社.
 20. Morishima, M. (1976), "Positive Profits with Negative Surplus Value : A Comment," *The Economic Journal*, vol. 86.
 21. Okishio, N. (1961), "Technical Change and Rate of Profit," *Kobe University Economic Review* in eds. by M. Krüger & P. Flaschel(1993).
 22. Okishio, N. (1963), "A Mathematical Note on Marxian Theorem," *Weltwirtschaftliches Archiv* in eds. by M. Krüger & P. Flaschel (1993).
 23. Sekine, T. (1982-3), "The Law of Market Value," *Science & Society*, vol. 46, no. 4.

24. Steedman, I. (1975), "Positive Profits with Negative Surplus Value," *The Economic Journal*, vol. 85.
25. Swanson, Paul A. (1989), "Market Value and the Choice of Techniqu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21, no. 1+2.
26. Woo, Henry K. H. (1992), *Cognition, Value, and Price : A General Theory of Valu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